

트럼프 정책의 불가측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글로벌 에세이

최성주
고려대 특임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③ 쏟아내는 관세폭탄

올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전 세계가 대혼돈과 불확실성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슬로건으로 작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관세폭탄은 세계경제의 근본 축을 뒤흔들고 있다. MAGA의 기저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니, 동맹국에 대해서도 배려와 관심이 없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국제협력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익만을 최우선 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NATO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대한민국(號)는 이러한 심대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국제안보 및 경제통상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작년 11월 5일의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트럼프 1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원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국내경제, 특히 제조업의 몰락에 따른 실업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많은 백인들을 대상으로 MAGA라는 미국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다. 그리고,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행정부의 정책으로 시행하기 시작한다. 경제와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21세기,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관세 부과에서 출발한다. 급기야, 4월 2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그런데, 미국의 국제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물가 인상으로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의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미국의 공격 목표가 바로 중국임을 보여준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를 발표하는 식으로 무역 전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을 좋아할 국민, 즉 소비자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이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폭탄으로 혼란스러운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핵심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지속되는 두 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름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중시해야 할 현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접근정책과 한미동맹의 장애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고 남북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1기 때처럼 북한 김정은과 직접 접촉하고, 주한미군 장비를 여타 지역에 배치하는 등 동맹 체제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으로부터 미국 본토의 안보를 약

속받는 대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소위 '스몰딜(small

deal)'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는 한미 간에 견지되어온 북한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행위다. 한국 물러미-북 접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도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협상 방식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감축을 위협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 트럼프는 한국 방위비를 10배 증액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작년 12월 이래 우리나라가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트럼프 정책의 광풍(狂風)을 상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대통령 부재에 따른 리더십의 공백이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지난 4월 10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포괄적인 협의를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자제로 당당히 임해야 한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전대미문의 난국이니, 기업에만 맡겨둬선 결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고, 기업 및 여야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예측 불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적시 대응하는 일이야말로 초급급 현안이다. 노조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노동자 권익보다도 대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일본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社說

지역 소멸 틀어막을 대선 공약 절실하다

인재 없는 인프라 의미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 민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지역 공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 호남권 경선의 권리당원 및 전국 대의원 투표는 오는 23-26일 실시하고, 합동 연설회는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투표 50%를 반영하며, 권역별 경선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마지막 경선일인 27일 수도권 대회에서 확정된다. 현재 김경수·김동연·이재명 후보 간 3파전으로 이 후보가 이미 반환점을 돈 순회경선에서 89.56%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다르다. 압도적인 지지와 분산 지지에 따라 추후 정권 사수에 나서는 국민의 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를 예단할 수 없어서다.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20대 대

선 결과를 보듯 0.73%p(24만7077표) 패배는 뼈아프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의 절대 지지가 절실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역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새로운 공약도 중요하지만 답보 상태인 광주·전남의 대형 숙원사업들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현재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전남 의과대학 설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등이 지지부진하다. 새로운 정부에 하루빨리 매듭짓는 일이 절실하다. 이들 과제들은 광주·전남에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과 직결돼 있다.

미래 먹거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 유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지역 발전 과업들이 지체된다면 인재들이 사라진 환경에 산업 인프라 조성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이 진정 광주·전남 민심을 얻고자 한다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 아닌 지역 소멸을 틀어막을 지역 현안부터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먼저 보여야 할 때다.

해상풍력 우리만의 신규 모델 구축하길

신안군 정부 집적화 단지 선정

정부가 전라남도 신안군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오는 2033년까지 19조원을 투자해 대형 원전 2기와 맞먹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는 갈수록 뜨거워 지고 기상 이변도 속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재난의 근본 대책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 전남도는 오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해상풍력 1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발전 규모만 대형 원전 2기의 발전량을 넘어서는 총 3.2GW에 달한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실시기관인 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이

지역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개발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전남은 인구감소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잃고 있고 고령화율이 높아 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은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해결책이다. 해상풍력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기 자체 산업과 연관기업 등의 육성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가치도 크다.

문제는 주민수용성과 공공성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송전선로 인근주민과 어민 등을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전남과 신안만의 새로운 해상풍력 모델도 구축해 가야 한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jnilbo

Kakao Talk: 전남일보
E-Mail: jebo@jnilbo.com



전남일은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하이힐은 처음부터 멋이나 장식을 위한 신발이 아니었다. 중세 페르시아의 기마병이 말안장에 발을 고정하기 위해 신었던 실용적 구조물이 그 기원이다. 그 구조는 유럽으로 전파되며 귀족과 권력자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굽이 높을수록 지위도 높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로 향했다. '높게 보여야 한다'는 욕망과 '높은 자를 보고 싶다'는 심리가 맞물리며, 굽은 단순한 장치를 넘어 상징이 됐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경선과정에서 '키높이 구두'가 거론됐다. 최근 열린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며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인신 공격성 질문을 던졌다. 홍 후보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한 후보의 키높이 구두는 이제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정치'의 한 장면이 되었고, 장식이 아닌 선언으로, 리더십이 아닌 연출의 상징으로, 무게가 아닌 높이의 정치로 읽혔다.

키를 높이려는 장치는 리더십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굽 위에 당당히 서 있는 듯하지만, 그 굽을 벗는 순간 흔들린다면 그것은 중심을 가진 리더가 아니다. 높이는 언제든 연출할 수 있지만, 무게는 삶과 사유, 책임의 시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는 8인의 대선 후보 중 4인을 가리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외교·안보, 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국가적 중대 사안들이 오갔지만, 토론의 중심에는 정작 '국민'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었다. 대선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트럼프와 잘 협상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당당해 보이느냐는 이미지 전쟁이 주를 이뤘다. 치열한 공방은 있었지만, 그 치열함이 반드시 깊이를 담보하진 않았다.

정치인이 굽을 신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존재감 없는 키를 감추기 위해서거나, 무게감 없는 말과 태도를 부풀리기 위해서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쪽에 더 가까웠을까. 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현정사 초유의 사태 앞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자처하지 않았다. 그 정부에 함께했던 인물들이 자신들의 역할은 외면한 채, '정권 재창출'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경쟁했다. 사과보다 계산이 앞섰고, 성찰보다 진영 구도가 우선했다.

정치란 무게로 견디는 것이지, 높이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는 연출이 아닌 실체로 말해야 할 때다. '키높이 구두'가 주는 허상의 높이는, 위기의 정치를 결코 지탱해줄 수 없다.

김성수 논설위원